

‘업무방해’ vs ‘성추행’ 맞고소...양대 노총 ‘진실 공방’

한국노총 “불법 집회 현장서 집단 폭행 불구 피해자 코스프레”

민주노총 “정당 노조활동 중 상대 조합원이 성추행·폭행 자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광주 자동차부품업체 앞 집회에서 일어난 충돌을 두고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광산구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회사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현장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양 노총 조합원끼리 충돌이 있었다.

한국노총은 영상 촬영을 하는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민주노총 측이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휴대전화를 달라’는 조합원에게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1차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조합원 수십 명이 밀고 당기며 집단 구타가 있었고 총세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옷가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실신한 후 구급차에 실려 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오히려 집단 폭

행 피해자인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반대편 노조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성추행과 폭행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입장은 달랐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금속노조 여성 간부가 들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이를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무리한 신체접촉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간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뒤에서 껴안아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

있어 조합원들이 이를 말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 연합 등은 1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남성 중심 조직문화에서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마구 침해되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민주노총 소속 여성 간부 피해자를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한국노총 측 조합원을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6일 노조 설립 시 노동자들이 내건 구호는 ‘존중받고 일하고 싶다. 막말하지마. 욕 하지마’였다.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여성인권 인식이 변하는 시점



1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광주·전남 여성, 노동, 인권 단체 대표들이 성범죄 비호 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서 사측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간부 추행은 예견된 사건이

었다”고 주장했다.

오유나 기자



후원 줄어도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1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이 초복 맞이 효 나눔 삼계탕 데이 행사를 준비해 지역 어르신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달 용기에 담고 있다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보통 수개월, 못 풀 가능성도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대전화 분석기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성북경찰서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고자 유족과 협의해 포렌식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휴대폰은 아이폰 11

출시 전의 최신기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잠금 해제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앞서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백모 전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백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을 4개월만에 해제했다.

정승호 기자

‘200억 벌금’ 기한넘긴 최서원...황제노역하나

3년으로 환산시 노역장 일당 약 1826만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된 최서원씨(가명 전 최순실)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벌금 200억 원을 지난달 최씨에게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최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2차 납부명령서 기한은 14일까지였다.

검찰은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금 출금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다만 78억원의 공탁금 중 추징금 63억여원을 제외한 약 15억원은 이미 국제청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제청은 최씨가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2017년 5월 78억원 상당에 대한 박영수 특별감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에 최씨는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78억원을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미승빌딩을 100억원 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만큼,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최씨의 재산 등

을 검토해서 강제집행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각한 미승빌딩 매각 대금도 강제집행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최씨 측은 “한해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씨는 끝까지 벌금 2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이 확정된 만큼 당장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